

전남 3개 수협 통·폐합 검토

농림수산식품부는 총 93개 일선 수협에 대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남의 흑산수협, 장흥수협, 전남 서부해수어류수협 등 5개 조합을 통폐합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수협이 부실 규모는 줄고 순자본비율은 개선됐으나 일부 수협은 부실 채권 발생, 연체를 증가 등으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됐다. 전체 수협 조합의 순자본 비율은 2002년 9월 -4.3%에서 작년 말 -0.1%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특히 93개 조합 중 부실이 심화돼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5개 조합(강원 2곳, 전남 3곳)은 지역 여건과 부실 정도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합병 등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개선 이행 약정(MOU)을 체결한 36개 수협 가운데 19곳은 MOU 목표를 이행했지만 나머지 17곳은 그렇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이너스 성장 1분기 내 종료”

윤증현 기재부장관 전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1분기 내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 방송권업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급락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증가해 작년 4분기의 -5.1%라는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1979년 오일쇼크 때 전기 대비로 3분기 동안,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시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비교적 단기(1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연차 금품 수수 의혹

민유태 전주지검장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5일 오전 10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인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검사장은 작년 6월 말 ‘마약퇴치 국제협력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박연차 회장의 지시를 받고 호텔로 찾아온 태광비나(태광실업 자회사) 간부로부터 1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민 검사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겸 형사부장을 맡고 있었다.

민 검사장은 중수부장과 차를 한 잔 마신 뒤 중수 2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민 검사장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태광비나 간부와 만났는지, 돈을 건네 받았는지, 출장 일정 변경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연합뉴스

지방 소득·소비세 내년 도입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

교부세 줄어 지방간 세수격차 오히려 심화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키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및 소비 부문에서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입장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내년도 재정 운영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내년까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며, 세제를 도입했을 때 지역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

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남 국회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세계개편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에 대해 현재 부처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부처간에 의견이 모이면 당정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시 지역간 편차 등을 우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지방소득세와 소

비세가 많이 걸리면 지방교부세를 줄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서 별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지방간 세수격차가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조치 이후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올 상반기 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규모가 열세인 자치단체들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지방교부세제와 적절한 병행 방안을 마련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묘지 합동참배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그리고 양 시·도 간부 공무원 60여명이 제2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3일 앞둔 1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있다. 시·도 관계자가 합동으로 5·18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 및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그리고 양 시·도 간부 공무원 60여명이 제2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3일 앞둔 1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있다. 시·도 관계자가 합동으로 5·18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 및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한 야당 존재감 부각 과제

■ 민주 이강래호 향후 진로 미디어법 처리 등 6월국회 첫 리더십 시험대

전북 출신 3선의 이강래 의원이 18대 국회 2기 민주당 원내사령관으로 선출돼 비주류의 ‘뒷심’을 과시했다. 지난해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 주류측의 견제 속에 원내 수장의 지휘봉을 거머쥔 것이다.

그의 당선은 민주당이 4.29 재보선 후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새 진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내려진 의원들의 ‘전략적 선택’ 측면이 많다. 지난 1년간 야성(野性) 부족 시비에 휘말렸던 원혜영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반작용이 일정부분 작용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분명한 존재감을 부각시켜달라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역학구조 측면에선 비주류가 그 영향력을 입증, 당내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진노 386’으로 대변되는 주류측에 대한 견제심리가 반영됐다. 분석과도 무관치 않다.

당내 리더십이 주류와 비주류로 이원화하면서 ‘투톱’인 정세균 대표와 원내대표인 이 의원과의 관계설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고 이 의원이 온건 비주류에 속하는 만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종철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한 비주류 단일후보로 나온 이 의원으로서 강성 비주류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경우에 따라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에게는 84세 소수야당의 한계를 딛으면서 대어관계가 잘 이끌어야 할 녹록치 않은 짐이 놓여 있다.

그는 “대안 있는 강한 야당”을 모토로 대어관계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을 병행하는 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략 기획동’, ‘책사’라는 수석어에 걸맞게 고비마다 협상가의 수완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당장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격전이 예고된 6월 국회와 첫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정한 성과를 통해 제1야당의 위상을 각인시켜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에 비쳐볼 때 일단 강경 대응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는 미디어법과 관련, “여권에 기존안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여론수렴이 안된 상황에서 표결처리는 의미가 없어 양보하기 힘들다”고 총력전을 벌였다.

계파간 갈등을 잠재우면서 당내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것도 숙제다. 당장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련, 이 의원이 범 정동영계로 분류되지만 경선 과정에서 중도자 역할을 자임해온 만큼 세력간 균형을 지켜하면서 주류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 10%대에 정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는 “단순한 견제야당을 넘어 수권정당으로 다가가겠다”며 연내 지지율 25% 달성을 공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 설

광주시, ‘문화특구사업’ 적극 나서라

광주문화산업의 핵심프로젝트인 투자진흥지구(문화특구) 조성사업이 광주시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의 엮박자로 장기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추진단이 이 사업의 법적 주체 등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문화특구 조성사업은 문화전당과 인접한 광주시 급남로 1가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 부지 1만5천283㎡에 고부가 문화산업체를 끌어들이는 민자유치 프로젝트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달라는 추진단의 요청에 대해 광주시와 공동재원(50대 50)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3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추진단이 공동사업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 문화특구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원을 이유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단이 전적으로 사업

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추진단은 문화특구 사업은 광주 문화수도를 위한 것인 만큼 수혜자인 광주시가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가 선행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특구사업이 본래대로 오르기 위해서는 추진단과 광주시의 협업 시스템이 본격 가동돼야 한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광주시의 전향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팔짱을 끼고 있다. 문화특구사업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성과와 직결되는 현안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해선 안된다. 한가하게 사업의 주체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명암 잘 살펴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도 부처 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태도로 보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지방의 자부재원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3.9%, 총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지자체 스스로의 재원으로는 공무원의 봉급도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세목의 신설이 지자체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붙는 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역 간 소득 편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까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도 부처 간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태도로 보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듯하다.

지방의 자부재원 확보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3.9%, 총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지자체 스스로의 재원으로는 공무원의 봉급도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세목의 신설이 지자체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붙는 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섬진·영산강 쓰레기 처리 비용

내년부터 정부-지자체 분담

전남도와 경남도가 부담해 온 섬진강하구 부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년부터 정부와 섬진강 수계에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또 영산강 쓰레기 처리비용도 정부와 전남도, 광주시가 분담하게 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이만희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섬진강을 낀 4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영산강 수계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섬진강의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전남도(24.3%), 전북도(11.2%), 경남도(14.5%) 등이 공동분담하게 된다.

영산강 쓰레기 처리비용은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하게 되며, 전남도가 31.5% 그리고 광주시가 18.5%를 나눠 부담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리 첫 소록도 방문… ‘한센인 차별’ 공식 사과

제6회 전국 ‘한센 가족의 날’ 행사가 16일 고흥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개최된다. 소록도병원 개원 9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사건), 임두성 국회의원, 박준영 도지사 등이 참석해 사회와 격리돼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한센인들과 가족들을 위로한다.

내년 5월 열리는 ‘한센 가족의 날’ 행사는 국립소록도병원과 사단법인 한빛 복지협회에서 주관해 한센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리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센인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6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나누는 일정을

가져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기념 행사에서 주관해 한센인들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킨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며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소록도 방문과 연설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던 소리

‘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전국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판사들은 이날 오전 판사회의 개최 동의를 불렀으며 대상 법관 51명 가운데 4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 ‘5분의 1 이상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켰다. 이번 모임은 특정 사안을 놓고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4일부터 의견을 모으기 시작, 지금까지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수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신

영철 사태’ 판사회의 전국 확산

대법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사법행정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보장 방안’ 등을 안건으로 18일 오후 5시 30분 법원 5층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과 인천지법에서 잇따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사태추이를 관망하던 울산지법 단독판사 15명도 이날 오후 임시모임에 관한 의견을 수렴, 같은 안건을 놓고 18일 오후 5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소장판사들은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릴 예정이다. 부산과 인천,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 법원에서는 ‘일단 사태를 관망하자’는 의견과 ‘재판권 독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